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2008~2011*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본 논문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연례적으로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를 사용하여 2008~2011년까지 북한사회의 변화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사회 변화를 사적 경제활동과 생활수준, 정보유통과 문화, 사회통제, 정치의식화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변화실태를 객관적·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4년 동안 북한의 주민생활은 시장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사적 경제활동의 공간이 확대되지 못하거나 위축되는 상황에 있으며 계층 간, 세대 간 생활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 중이다. 공간기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정보화와 한류문화유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정부비판 행위가 증가하며 집단주의 가치가 조금씩 와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정치의식화의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정치의식화가 지속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아직은 낮은 데다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의 효과가 작동하여 체제비판 의식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RF-2010-361-A000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주제어: 탈북자 면접조사, 북한사회 변화, 사적 경제활동, 양극화, 정보유통, 한류, 사회통제, 주체사상, 정치의식화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연구목적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북한사회는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발생한 이후 압축적으로 추진한 후계체제가 정치적 안정을 구가하고 있고 중국의 지원까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문화적 변화를 볼 때 북한사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다. 굶주림과 식량난의 지속으로 생존을 위한 변화의 요구가 잠재해 있고, 한류의 유입과 100만 명이 넘는 휴대폰 사용자의 증가는 북한의 정보문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발전한다면 2010년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쓸었던 ‘재스민 혁명’과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북한에도 상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탈냉전 이후 북한연구가 탈북자를 활용한 경험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많은 연구는 탈북자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증언을 정보와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북한 당국이 공개하는 통계나 경험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북한연구의 중요한 방법론을 형성

하고 있다. 탈북자 조사를 활용한 북한연구가 시작되어 정보 중심, 원전 중심의 연구관행에서 벗어나 구술방법과 면접조사를 접목하는 객관적·과학적 방법이 시도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보와 자료를 체계화하지 않고 특정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다른 학문분과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열등한 학문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북한연구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탈북자 조사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를 활용하여 2008년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실태를 경험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2008~2011년의 기간을 살펴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제한 때문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후계승계를 추진한 기간이기도 하고, 남한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기로 북한의 변화를 남한의 대북정책과 연관 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과 2009년, 2011년에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설문결과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인(탈북자) 통일의식조사」의 일환으로 2008년 7월과 2009년 10월 2회에 걸쳐 하나원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2010년에는 하나원 방문조사가 허용되지 않아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 하나원 퇴소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도 설문조사는 4~6월 3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최근 북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북한을 떠난 탈북자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2011년의 조사는 과거의 조사에 비해 북한을 떠난 시점이 2010년과 2011년으로 가까운 시기여서 북한의 최근실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2011년 조사에 응한 탈북자들은 제3국 체류경험이 거의 없거나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북한사회의 현 실태와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한 자료가 각 연도마다 표집의 성격이 달라 분석의 한계는 존재한다. 2008년과 2009년은 탈북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원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2011년 조사는 2010년 1월 이후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북한의 최근 실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표집대상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입국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 2008년과 2009년의 조사는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실시한 2011년의 조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신중해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샘플링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사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으며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가운데 북한사회실태 부분만을 사용할 것이다. 즉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남인식, 북한실태, 남한 적응실태 등 종합적으로 수행한 작업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북한실태에 관한 설문만을 사용할 것이다. 2011년의 면접조사는 기존 2년(2008~2009년)간 수행된 탈북자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향후 해마다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학술 및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록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사회 변화를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즉 사적 경제활동과 생활수준, 정보유통과 문화적 변화, 사회통제, 정치의식화 등 네 영역을 차례로 살펴본다. 주민의 사적 경제활동과 생활수준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일차적인 영역이며 시장화와 같은 대내 개혁조치들로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정보유통과 문화는 주민들의 사상과 의식 변화를 촉발하는 관념적 영역으로 체제의 개방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사회통제는 북한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억압과 설득의 물리적·도덕적 기제를 말하며 사회조직과 질서를 유지하는 직접적인 능력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화는 체제비판 의식이나 체제수호 의지 등의 수준을 의미하며 정치체제의 유지 또는 붕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2. 기존 연구 검토 및 사용 자료 분석

1) 기존 연구 검토

탈북자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김병로¹⁾, 김성철,²⁾ 『북한인권백서』³⁾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북한의

1)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1994).

2) 김성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1996).

인권, 경제, 사회, 군사, 정치 등 여러 주제영역에서 탈북자 조사를 토대로 한 경험적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병로⁴⁾의 연구는 탈북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여 북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를 철학, 집단주의, 수령관, 우리식 사회주의 정치의식 실태로 평가하였다. 김성철⁵⁾의 연구는 탈북자 2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체제의 위기수준과 내구력을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분야에서 평가한 작업이다. 이 연구는 10년 후인 2006년에도 전현준 외⁶⁾의 연구로 이어져 탈북자 261명에 대한 면접조사에 근거하여 1996~2005년까지의 북한체제의 내구력 실태와 변화를 분야별로 평가하였다. 1996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는 해마다 20여 명의 탈북자를 인터뷰하여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주제별로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조정아 외⁷⁾는 각각 탈북자 41명과 54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의식 및 정체성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북한주민 의식의 일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 연구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개인이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는 미시적·내면적 기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수암 외⁸⁾는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탈북한 41명의 탈북자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의식주 실태, 교육과 의료 실태 등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실태와 계층, 세대, 성별에 따른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4)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5) 김성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6)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06).

7)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8)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이금순·전현준⁹⁾의 연구는 고문, 구타, 성폭력 등 21개 항목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 샘플규모를 천 명 단위(1,083명)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탈북자 면접조사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교덕·정규섭·이기동¹⁰⁾은 탈북군인(200명)이라는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북한군대의 기강 실태를 분석하였고, 정영태 외¹¹⁾는 당과 보안기구, 군대, 근로단체의 실태를 평가하였다. 특수집단에 대한 조사는 집단 내 착복과 유용 등 여러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충성심과 사기가 여전히 높고 80~90%의 혁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탈북자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실태를 분석한 또 다른 묶음의 연구결과는 주로 경제학자와 사회학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경험적 자료를 중시하고 엄격한 통계분석을 위주로 하는 경제학과 사회학의 영역에서 북한의 경제와 사회 연구를 위해 탈북자 면접을 방법론으로 활용한 것이다. 박석삼,¹²⁾ 양문수,¹³⁾ 이영훈,¹⁴⁾ 이승훈·홍두승,¹⁵⁾ Kim and

9)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0).

10) 이교덕·정교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11)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1).

12)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 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2002년 3월).

13)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2005).

14)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15)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 변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Song,¹⁶⁾ 김병연·양문수¹⁷⁾ 등의 연구는 탈북자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화와 사경제 활동의 증가, 그에 따른 소득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임금소득과 장사소득의 비율이 1:9이며 비공식 부분의 소득이 70~75%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높는데, 이러한 구조는 7·1경제조치 이전부터 형성되었고 최근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외국학자로서 탈북자 조사를 토대로 북한사회를 분석한 연구는 해거드(Stephan Haggard)와 놀랜드(Marcus Noland)의 공저¹⁸⁾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2009년 11월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의 시장화가 주민의식 변화에 미치는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부패와 비리가 증가하고 시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북한정권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각자의 목적에 맞게 면접대상을 선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한 분석을 시도한 것들이다. 이러한 시도는 북한실태에 대한 유용한 자료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단편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연구들이 일정 시점에서 북한실상의 단면을 보여

16) Kim, Byung-Yeon and Dongho Song,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2008).

17)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탈북자 설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평화학 연구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2010).

18)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e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011).

주는 훌륭한 분석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비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판단의 준거를 결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 실태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의 기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각 연도 간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사하였지만 특정 시점에서의 단면적 분석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와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북한사회의 변화 방향과 크기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2008년, 2009년, 2011년에 각각 84%, 71%,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입국탈북자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78.2%, 2009년 77.2%임을 감안하면 본 조사의 샘플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⁹⁾ 물론 여성이 77~7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탈북자 샘플은 여성이 51.3%를 차지하는 북한전체의 인구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탈북자 중 남성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북한인구 모집단을 의식하여 의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을 늘릴 경우에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8년의 경우, 20대 28.4%, 30대 37.8%, 40대 19.6%, 50대 이상 5.4%로 탈북자 전체 모집단과 비교했

19)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0』(서울: 통계청, 2011), 269쪽.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2008~2011)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8	2009	2011
성별	남자	47(15.9)	91(24.6)	40(35.1)
	여자	249(84.1)	262(70.8)	74(64.9)
	무응답	-	17(4.6)	-
연령	50대 이상	16(5.4)	31(8.4)	27(23.7)
	40대	58(19.6)	82(22.2)	17(14.9)
	30대	112(37.8)	120(32.4)	30(26.3)
	20대	84(28.4)	111(30.0)	39(34.2)
	10대	12(4.1)	2(0.5)	1(0.9)
	무응답	14(4.7)	24(6.5)	-
학력	대학교	17(5.7)	29(7.8)	12(10.5)
	전문학교	27(9.1)	33(8.9)	25(21.9)
	고등중학교	223(75.3)	287(77.6)	76(66.7)
	소학교	16(5.4)	15(4.1)	1(0.9)
	무응답	13(4.4)	6(1.6)	-
지역	평양, 개성, 남포	5(1.7)	11(3.0)	1(0.9)
	평안남도	8(2.7)	7(1.9)	6(5.2)
	평안북도	7(2.4)	5(1.3)	-
	함경남도	30(10.1)	32(8.6)	5(4.4)
	함경북도	181(61.2)	258(69.7)	60(52.6)
	자강도	4(1.3)	1(0.3)	-
	양강도	29(9.8)	22(6.0)	41(36.0)
	황해남도	5(1.7)	4(1.1)	-
	황해북도	5(1.7)	4(1.1)	1(0.9)
	강원도	9(3.0)	9(2.4)	-
무응답	13(4.4)	17(4.6)	-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국내 입국 탈북자 전체의 연령은 20대 22.2%, 30대 41.6%, 40대 27.8%, 50대 8.4%로 30대의 연령층이 가장 많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각 연령별로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대와 30대의 연령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연령구조는 탈북자 모집단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샘플은 타당성이 있다.

교육수준을 보면 2009년의 경우 고등중학교 77.7%, 전문학교 8.9%, 대학교 7.8%로 조사대상자들의 다수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이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15%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약 43%를 차지하여 최근 탈북·입국한 북한주민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 전체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75.4%, 전문대졸 14.6%, 대졸 10.0%로 본 연구에 사용된 탈북자 샘플과 유사성이 높다. 이는 북한의 평균 교육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교육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응답자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노동자의 비율이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는 45%와 46%를 차지했고, 2011년 조사에서는 30%로 줄어들었으나, 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민은 약 8~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무원은 각 연도에 7%, 5%, 13%, 지식인·전문인은 4%, 6%, 8%를 차지했다.

출신지역별 분포는 <표 1>에서 보듯이 함경북도 출신 응답자가 각 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8년과 2009년의 경우를 보면, 함경북도가 각각 61.2%, 69.7%로 가장 많고 함경남도 10.1%, 8.6%, 양강도는 9.8%, 6.0%로 뒤를 잇고 있다. 이는 탈북자

20) 북한주민 평균 교육수준은 2008년 현재 고졸 이하 76.8%, 전문대졸 10.6%, 대졸 12.7%로 탈북자의 평균교육수준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CBS: Pyongyang, 2009) 참조.

전체와 비교할 때 함경북도 69.1%, 함경남도 9.1%, 양강도 5.7%, 평양 4.7% 등으로 함경도와 양강도 등 중국과 인접한 지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2011년의 샘플은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즉 2011년에는 함경북도 출신이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변함이 없으나 양강도 출신이 36.0%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샘플이 최근 탈북자만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함경북도 지역에서 탈북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이룰수록 양강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출신지역을 고려할 때 탈북자 샘플은 북한인구 모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오류가 클 것으로 짐작된다. 탈북자 샘플이 북한의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북한 내 함경북도 인구비율은 10.0%인 데 비해 탈북자 중 함경북도 출신이 60~70%라는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²¹⁾

본 연구의 목적이 북한실태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의 탈북시점이 중요하다.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기간에 탈북한 사람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하나원 내 집단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탈북시기가 아닌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2008년과 2009년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0%가 북한을 탈북한 지 5년 미만이었다. 즉, 나머지 약 50%는 북한을 떠난 지 5년 이상이 지난 탈북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북한에 대한 평가가 최근의 북한실태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다행히

21) 북한의 지역별 인구비율은 2008년 현재 평양 13.9%, 평북 11.7%, 평남 17.4%, 함북 10.0%, 함남 13.1%, 황북 9.1%, 황남 9.9%, 량강 3.1%, 강원 6.3%, 자강 5.6% 등이다. *ibid*, 18~22쪽.

2011년 조사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한국사회로 입국한 주민들을 표본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때, 탈북자 전체 모집단과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나, 북한의 인구학적 특성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성별과 출신지역에서 북한에 거주하는 모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탈북자 샘플을 근거로 북한실태를 분석할 때에는 탈북자 샘플의 특성과 오류를 충분하고도 적절히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탈북자 인구의 특성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면접조사는 북한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유용성이 매우 크다. 비록 표집의 대표성과 정교함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각 연도별로 응답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과 배경변수의 지속 및 변화를 염두에 두고 분야별 설문문항을 분석한다면, 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학술적·정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사적 경제활동과 생활수준

1) 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식량난이 악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직장의 월급과 국가배급에 의존하지 않고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김병연은 1996~2003년 동안 북한주민의

<표 2> 북한에서의 공식 월급과 비공식 수입(2008~2011)

단위: 명(%)

구분	공식 월급			비공식 수입		
	2008	2009	2011	2008	2009	2011
100원 이하	65(22.0)	86(23.2)	44(38.6)	13(4.4)	55(14.9)	20(17.5)
100~1,000원	36(12.1)	39(10.5)	22(19.3)	22(7.4)	14(3.8)	-
1,000~10,000원	39(13.2)	93(25.1)	14(12.3)	28(9.5)	28(7.5)	20(17.5)
10,000원 이상	5(1.7)	7(1.9)	10(8.8)	42(14.2)	70(18.9)	49(43.0)
무응답	151(51.0)	145(39.2)	24(21.0)	191(64.5)	203(54.9)	25(21.9)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296(100.0)	370(100.0)	114(100.0)

총소득 중 비공식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인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²²⁾ 이번 조사에서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탈북자 자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무응답이 40~50%로 너무 많아 응답자만으로 비공식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비공식 수입이 있다고 밝힌 사람들은 2008년에 31.1%, 2009년에 30.2%였으나, 2011년에는 60.5%로 늘어났다.

비공식 소득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장사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었다. 그 결과 56.8%(2008년) → 66.7%(2009년) → 69.3%(2011년)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약 70%의 응답자가 장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직업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사는 이들의 제2의 직업으로서 비공식 수입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3>에서 지난 4년간 장사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

22)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운영관·양운철 엮음,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9), 75~79쪽.

<표 3> 장사경험의 유무(2008~2011)

구분	단위: 명(%)		
	2008	2009	2011
있다	168(56.8%)	206(66.7%)	79(69.3%)
없다	112(37.8%)	154(41.6%)	31(27.2%)
무응답	16(5.4%)	10(2.7%)	4(3.5%)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사회에 장사 등의 사적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근거로 보면 북한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와 같이 “북한주민들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90% 이상 또는 80%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70%, 60% 정도 등의 순서로 답하였다. 그러나 50%이상의 주민들이 사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합해 보면, 89.2%(2008년) → 84.7%(2009년) → 82.1%(2011년)로 최근 4년간 장사 및 개인 활동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장사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50% 미만이라는 평가는 9.1%(2008년) → 13.0%(2009년) → 16.1%(2011년)로 증가하여 사적 경제활동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지만 빈곤층의 확대 및 양극화 현상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사적 경제활동 비율이 80%라고 평가한 사람이 30.7%로 많았고 2011년에는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32.1%로 많았으며,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28.3(2008년) → 20.8%(2009년) → 32.1%(2011년)로 대폭 증가한 것을 보면 일부 집단이나 계층에서 장사 및 개인사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표 4> 북한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평가(2008~2011)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1
10% 미만	0(0.0)	7(1.9)	2(1.8)
20%	3(1.0)	7(1.9)	2(1.8)
30%	13(4.4)	15(4.1)	9(8.0)
40%	11(3.7)	19(5.1)	5(4.5)
50%	18(6.1)	42(11.4)	7(6.3)
60%	26(8.8)	42(11.4)	13(8.9)
70%	47(15.9)	46(12.4)	14(13.4)
80%	91(30.7)	108(29.2)	24(21.4)
90% 이상	82(27.7)	75(20.3)	36(32.1)
무응답	5(1.7)	9(2.4)	2(1.8)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으로 사적 경제활동 비중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더 우세하고 사적 경제활동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지난 4년 사이에 많아진 것을 보면, 사적 경제활동은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북한주민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이러한 양면적 평가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강성국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경제를 복원하려는 북한의 정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의 장사인구나 시장의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부를 축적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북한 당국이 시장 억제정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사적 경제활동과 시장활동의 위축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계층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시장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계획경제 복원을 시도하면서 사적 경제활동의 기득권 구조가 부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2) 주민생활의 양극화

주민생활의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빈곤층이 확대되며 다른 한편으로 부유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의 <표 2>에서 보았듯이 공식 월급이 100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8년에 22.0%에서 2009년 23.2%로, 2011년에는 38.6%로 늘어났다. 2011년의 경우에는 공식 월급이 아예 없다고 답한 사람도 26.3%나 되었다. 2008~2009년과 비교할 때 2011년에 하층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2008~2009년에는 1만 원 이상의 공식 월급자가 2% 미만이었으나 2011년에는 8.8%로 늘어났다. 최근 2~3년 사이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2011년에 심화된 것으로 보여 2011년 조사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았다. <표 5>는 조사대상자의 2011년도 공식·비공식 수입을 표시하고 있다. 공식 월급에서 1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10만 원 이하의 공식 월급 소득자가 7명, 10만 원 초과 월급 소득자가 3명이나 되었다. 비공식 수입에서는 그 편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1만 원 이상의 비공식 소득자는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4.2%, 18.9%였으나 2011년에는 43.0%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중 1만~10만 원 소득자가 20.2%, 10만~50만원 소득자는 15.8%, 50만~100만 원 소득자 3.5%, 100만 원 이상 소득자 3.5%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2008~2009년에 비해 2011년에 비공식 월급에 대한 가계경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며,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의 필요 생활비와 실제 소득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식·비공식 소득이

<표 5> 북한의 공식 월급과 비공식 수입(2011)

단위: 명(%)

항목	공식 월급	항목	비공식 수입
0원	30(26.3)	0원	20(17.5)
100원 이하	14(12.3)	1만 원 이하	20(17.5)
1,000원 이하	22(19.3)	10만 원 이하	23(20.2)
5,000원 이하	12(10.5)	50만 원 이하	18(15.8)
만 원 이하	2(1.8)	100만 원 이하	4(3.5)
10만 원 이하	7(6.2)	100만 원 초과	4(3.5)
10만 원 초과	3(2.6)		
무응답	24(21.1)	무응답	25(22.0)
합계	114(100.0)	합계	114(100.0)

10만원을 초과하는 응답자는 25% 정도이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은 51.8%에 달해 실제 소득과 필요 생활비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 생활비(월 소득)가 얼마 정도여야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10만 원 이하’로 답한 사람은 31.5%이며, 20~3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3%, 50~100만 원 23.7%, 100만 원 이상 1.8% 등으로 응답하여 전체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8%가 1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북한주민의 실질 소득이 필요 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생활의 양극화 추세를 보여주는 질문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이 200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표 6>에서 보듯이 생활수준이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과 ‘높아졌

< 표 6 >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한 생활수준변화 (2011)

단위: 명(%)

항목	빈도(%)	구분	비율
훨씬 좋아짐	21(18.4)	좋아짐	50.0%
조금 좋아짐	36(31.6)		
조금 나빠짐	12(10.5)	나빠짐	48.2%
훨씬 나빠짐	43(37.7)		
결측	2(1.8)	결측	1.8%
합계	114(100.0)	합계	100.0%

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9.1%, 50.9%로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다. 빈부격차의 심화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은 최근 북한의 중앙당 간부강연회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강연회의 강사로 나선 장용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오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백만장자, 억만장자 ‘돈주’들이 생겨 일심단결의 이반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²³⁾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생산양식에서 사적 경제활동의 비중이 일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그 구조가 지속적인 불평

23) “그런데 사회에는 ‘고난의 행군’을 지나오면서 일심단결의 이반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인민들이 돈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끼그끼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 나가 앉아 있는 사람들을 옆두에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 돈주라는 자들이 빠져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백만장자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억 단위로 나갔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노동계급입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돈맛을 들이면 자연히 사상적인 변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인민. 누가 인민인가. 반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민입니다. 사상적인 변질이 온 자들, 인민에도 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못 치는가. 배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칩니다.” 장용순, 중앙당강연회 녹취내용(2007.7).

등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병연·양문수²⁴⁾의 연구에서 개인위탁경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조업의 20%, 서비스업의 50%, 무역의 40%로 평가하고 있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위탁경영의 형태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근래 북한 당국이 계획경제의 복원을 목표로 새로 진입하려는 개인사업자들이나 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면, 개인위탁경영과 같은 기존에 형성된 사적 경제활동의 구조가 양극화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과 학력의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 현상을 교차 분석하여 보면 일정한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자들 중에는 20~40대에서 많은 반면 50~60대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20대, 30대, 40대에서는 각각 57.8%, 56.6%, 62.5%로 높으며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33.3%, 25%로 낮다. 또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자가 생활수준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이 많다. 생활수준이 나아졌다는 응답자 중 대졸 75%, 전문대졸 54%로 높은 반면, 고졸은 46%로 낮다. 경제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북한에서도 장사나 개인사업 등 사적 경제공간을 활용하여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젊은 층과 고학력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한국사회에 북한 식량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최근 남

24)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탈북자 설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사회 내에 북한 식량난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최근 방북자들의 관찰을 예로 들며 북한 전반에 활력이 넘치며 차량도 많아졌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사용한다.²⁵⁾ 이와는 반대로 진보세력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국내 NGO의 보고서 등을 예로 들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예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대북지원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다.²⁶⁾ 이러한 평가가 얼핏 보면 상호 모순된 것 같지만, 최근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양측의 평가가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5) 『조선신보』, 2010년 1월 23일. 평양 제1백화점에서 1월 1일 오전 중 155대 등 국내산 TV(삼일포: 14, 21, 29인치, 다박솔: 21인치 반평면형) 판매 증가 및 연간 30만 대 양산체제 돌입 등 김병관 지배인이 자랑했다고 전했다.

26) 2011.3.25, FAO, WFP, UNICEF의 북한실태보고서는 북한주민 610만 명이 굶주림의 위협을 받고 있고, 최대 108만 6000톤의 식량이 부족하며, 43만 4000톤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2011.2.18~3.1 방북한 캐나다의 자선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의 수전 리치 대표는 지난 10년간 40차례 방북했지만 2011년에 가장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영유아들의 영양상태와 식량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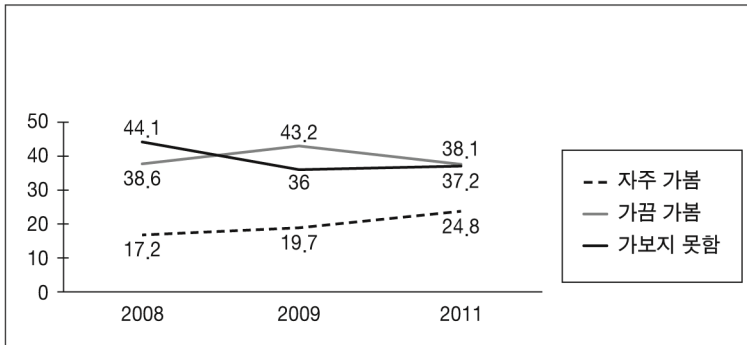
4. 정보유통과 문화적 변화

1) 주민 유동성 증대

주민 유동성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늠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시, 군, 구역 단위로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⁷⁾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사회에서 주민 유동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폐쇄체제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단초가 된다. <그림 1>은 “다른 지역(다른 군, 시, 도, 외국)에 가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자주 가보았다’는 응답이 17.2%(2008년) → 19.8%(2009년) → 24.8%(2011년)로 증가하고 있고, ‘거의 가보지 못했다’고 말한 응답자는 44.1%(2008년) → 36%(2009년) → 37.2%(2011년)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 유동성이 증가하는 주요한 이유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

<그림 1> 타 지역 이동 경험(2008~2011)



27) 김병로,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적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으로부터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중국 등 해외거주 가족 및 친인척 방문도 장려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은 15만 2,300명으로 2010년에 비해 31%가 증가하였다.²⁸⁾ 중국 방문자들 가운데 체류기간을 어기고 수개월 혹은 1년씩 귀국하지 않는 북한주민이 늘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보위부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유동인구의 증가는 정보유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주민 유동성은 30대(33.3%)와 40대(31.2%)에서 높고, 20대(18%)와 60대(16.6%)에서는 낮다. 그런데 <표 1>에서 보면 탈북자의 연령은 오히려 20대가 28.4%(2008년) → 30.0%(2009년) → 34.2%(2011년)로 증가하였고,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탈북자가 늘어나는 독특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탈북자의 연령층이 20대의 젊은 층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50대 이상의 고령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주민 유동성이 30대와 40대에서 높은 이유는 북한에서 직장생활을 가장 활동력 있게 하는 연령층으로 공식·비공식 목적의 타지 방문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적 경제활동 부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비해 생활수준이 더 좋아졌다는 응답에서 40대가 가장 높았고 30대와 20대가 그다음을 차지한 것을 보면, 30~40대의 높은 유동성은 사적 경제활동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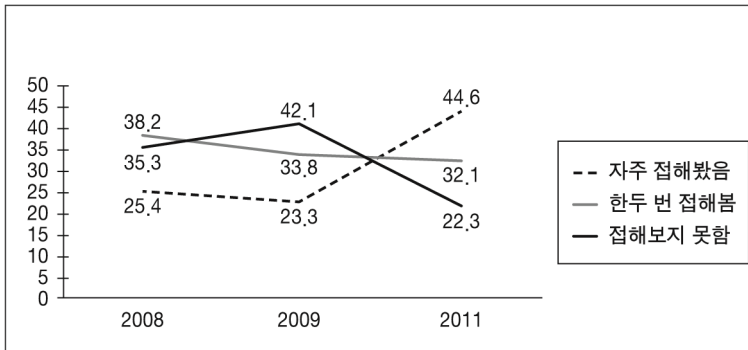
28) 『연합뉴스』, 2012년 2월 10일.

2) 한류 확산과 정보유통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류’의 확산과 정보유통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 방송, 영화, 드라마 노래(음악)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64.7%(2008년), 57.9%(2009년), 77.7%(2011년)로 약 60~70%의 응답자가 한류를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주 접해보았다’는 응답은 25.44%(2008년) → 23.3%(2009년) → 44.6%(2011년)로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전혀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5.3%(2008년) → 42.1%(2009년) → 22.3%(2011년)로 급감하여 최근 연간에 한류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문화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연령층은 예상한 바와 같이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많았다. 즉 30대(60%)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대(47.3%)가 많으며, 40대(37.5%)와 50대(33.3%)와 60대(25%)로 세대가 높아질수록 접촉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별로는 대졸

<그림 2> 한류접촉경험(2008~2011)



<표 7> 탈북 후 북한소식 경험의 정도(2008~2011)

구분	단위: 명(%)		
	2008	2009	2011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다.	45(15.2)	46(12.4)	19(16.7)
조금 접할 수 있다.	156(52.7)	183(49.5)	62(54.4)
거의 접할 수 없다.	86(29.1)	122(33.0)	30(26.3)
무응답	9(3.0)	19(5.1)	3(2.6)
합계	296(100.0)	370(100.0)	114(100.0)

(75%)과 전문대졸(66.6%)이 많은 반면 고졸(32%)은 적어 학력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남한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접촉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젊은 층의 한류 접촉 증대가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이 탈북 후 북한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표 7>은 약 70% 정도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러 보고서들이 밝히고 있듯이, 예전에는 인적 왕래에 의한 소식 전달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래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소식 전달 현상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2월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 대수가 2008년 12월 개통 이후 3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²⁹⁾ 여기에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탈법적인 중국의 휴대전화까지 합하면 정보유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응한 탈북자 가운데 남한에 친척이 있는 비율이 30%(2008년) → 40%(2009년) → 56%(2011년)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도 북한의 문화접촉이 확대되는 추

29) 『통일뉴스』, 2012년 2월 4일.

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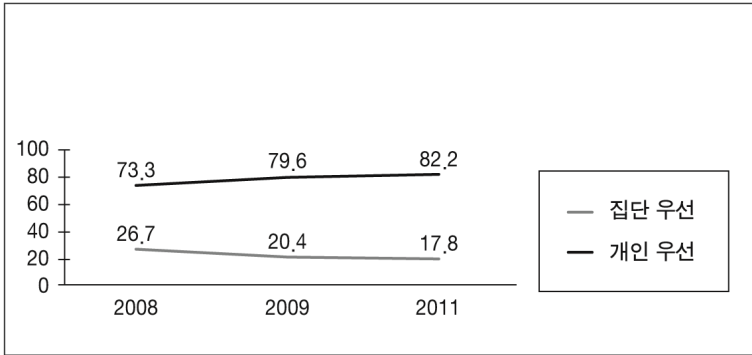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정보유통이 확대되는 추세와는 반대로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한에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8%(2008년) → 72.0%(2009년) → 64.6%(2011년)로 최근 4년 사이에 14.2%가 감소하였다. 이는 정보유통이 차단된 결과라기보다는 실제로 남한의 대북지원 활동이 감소함으로써 야기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대북지원 활동이 활발하던 때에는 북한주민들의 80%가 남한으로부터 대북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면서 65%의 수준으로 인지도가 낮아진 것이다.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어야만 북한 내 정보유통과 한류문화 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개인주의 가치 확대

<그림 3>이 보여주듯이 북한에서 집단주의 가치는 약화되고 개인주의 경향이 커지고 있다. 집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008년 26.7%에서 2009년 20.4%로 감소했고 2011년에는 17.8%로 낮아졌다. 반면, 개인이 우선이라는 응답은 2008년 73.3%에서 2009년 79.6%로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 82.2%로 증가했다. 지난 4년간의 면접조사에서 집단가치보다 개인가치 우선의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난으로 생존을 위한 개인사업 및 장사 인구가 늘고 주민 유동성과 정보유통이 증대함으로써 과거 사회주의 체제가 강조했던 집단주의 가치가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그림 3> 개인/집단 우선 가치(2008~2011)

단위: 백분율(%)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대(89.7%)와 30대(82.7%), 40대(87.5%) 등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개인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세대는 노출된 시장 환경에 자생적으로 적응하며 외부의 정보유입과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면서 생각과 가치가 더 빨리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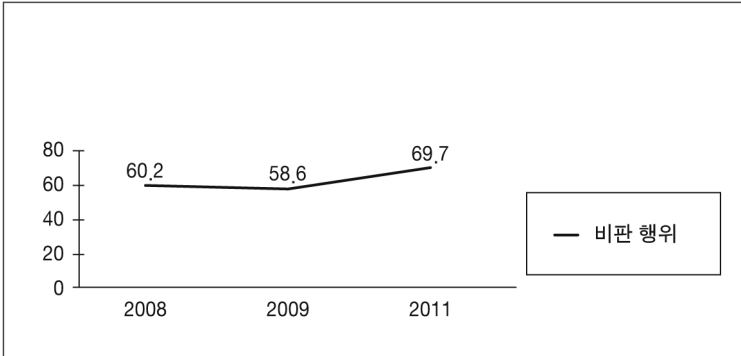
5. 사회통제 실태

1) 비판 행위 증가

<그림 4>는 북한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최근 연간에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많다’와 ‘약간 있다’ 등 ‘있다’는 응답은

<그림 4> 정부비판 행위(2008~2011)

단위: 백분율(%)



60.2%(2008년) → 58.6%(2009년) → 69.7%(2011년)로 증가한 반면, ‘대체로 없다’와 ‘전혀 없다’ 등 ‘없다’는 응답은 39.8% → 41.4% → 30.3%로 감소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가 과거보다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의 증가는 사회통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49.8%(2008년) → 38.7%(2009년) → 37.2%(2011년)로 감소한 반면,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2008년) → 61.2%(2009년) → 62.8%(2011년)로 증가하였다. 이는 공간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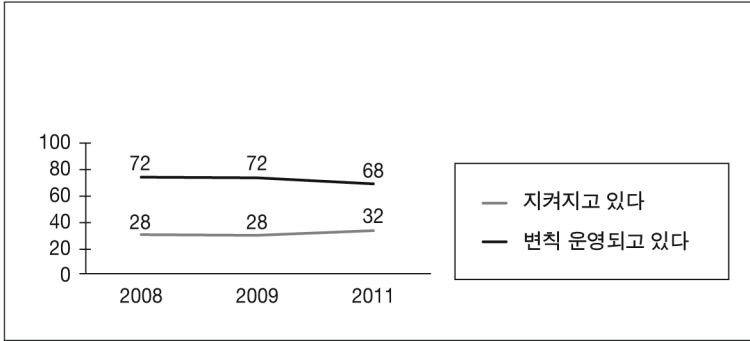
2) 생산규율

<그림 5>는 직장에서 생산규율이 지켜지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산규율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약 30%인 반면,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70%를 기록하여 직장의 생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이러한 변칙적 생산활동은 오랜 식량난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규율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28%(2008년) → 28%(2009년) → 32%(2011년)로 상승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직장에서의 생산규율이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최근 4년간 지속되거나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위의 자료를 근거로 보면 직장의 생산규율이 30% 정도 유지되고 있고 70%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칙적 운용이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고 최근 들어 안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탈북자의 설명에 의하면 직장 출근은 사회안전부에 매일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는 높은 출근율을 기록한다. 출근하지 않고 바로 개인부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서류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서면보고를 하기 때문에 공식 출근율은 유지되지만 실제 출근율은 다르며 생산에 직접 동원되는 비율은 30% 정도라 할 수 있다. 예컨대, 8.3작업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출근하여 보고하고 나오거나 서면작성하고 바로 개인활동으로 들어가며, 그 대가로 8.3작업반의 경우 1달에 여자는 15,000원, 남자는 30,000원을 직장에 납입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직장의 성격

<그림 5> 직장 내 생산규율(2008~2011)

단위: 백분율(%)



에 따라 차이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업소나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작업방식과 유형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생활총화

<표 8>은 북한의 사회통제 실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주간 생활총화의 참가실태를 보여준다. 2011년의 경우 생활총화 참여는 50~70%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많았고, 70~90%라는 응답은 23.7%, 90% 이상이라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2008년과 2009년의 자료가 없어 비교할 수 없으나, 통일연구원의 자료³⁰⁾에서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26.0%(2008년), 16.2%(2009년), 19.5%(2010년)로 조사된 점과 비교하면 생활총화 참여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2010년에 19.5%에서 2011년에 17.5%

30) 통일연구원 자료는 2010년 8월말부터 9월초에 걸쳐 탈북자 6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표 8> 생활총화 출석률(2011년)

출석률	빈도(%)
30% 미만	14(12.3)
30~50%	12(10.5)
50~70%	39(34.2)
70~90%	27(23.7)
90% 이상	20(17.5)
무응답	2(1.8)
합계	114(100.0)

로 2.0% 정도만 낮아졌고, 2009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조금 높아졌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생활총화의 참석률은 대체로 70~8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실제 참석률을 표시한 것이며 명목상의 출석률과는 다를 수 있다. 대체로 북한에서 생활총화는 경제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빠지게 되면 반드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 생활총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비서에게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와 생활총화를 서신으로 보내야 한다.³¹⁾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명목상 출석률은 매우 높을 것이며, 단지 실제 참석률이 70~80% 정도라 할 수 있다. 지역과 직장의 상황에 따라 출석률에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생활총화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1) 아무런 사유 없이 생활총화에 불참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8.3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직생활은 필수적이며 한 달에 1번씩 통보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학습과 생활총화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주민 김○○(순천시 거주) 인터뷰, 2010년 9월 중국 단둥.

6. 정치의식화 실태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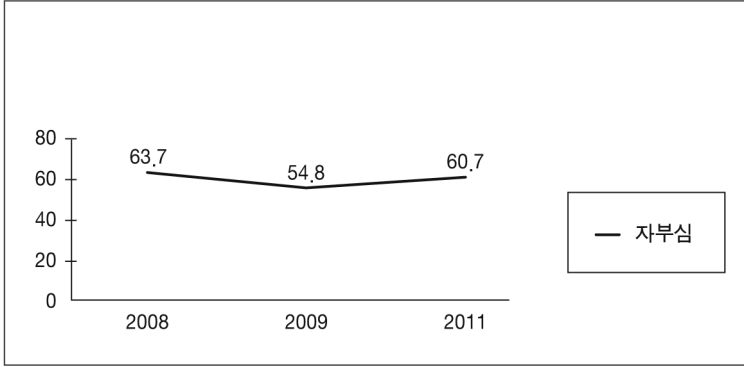
<그림 6>은 주체사상 이념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체사상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약 60%로 ‘없다’는 응답률 40%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최근 4년 동안을 보면, 63.7%(2008년) → 54.8% (2009년) → 60.7%(2011년)로 2009년에 약간 낮아졌으나 2011년에 다시 회복하여 6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사상의 자부심이 약 80%의 수준을 유지하던 1994년과 비교하면 20%가 낮아진 것이지만,³²⁾ 최근 몇 년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최근 연간에 급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사상학습과 선전선동부의 활동이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6.6%)가 가장 높고, 20대(63.1%), 40대(58.8%), 60대(54.5%), 50대(40%) 순으로 20~40대가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50대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이 주체사상에 대해 비교적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당국의 학교교육과 군복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상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50대 연

32)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그림 6>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2008~2011)

단위: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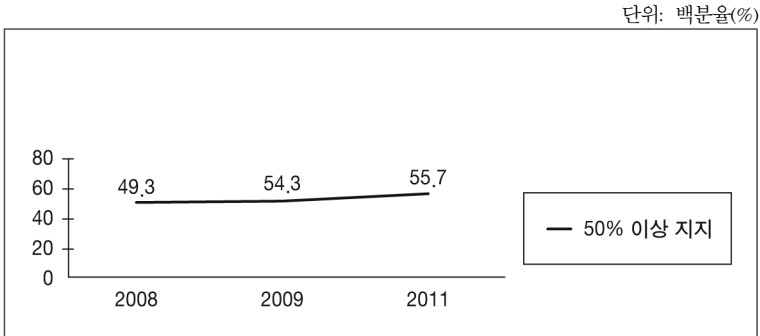


평균의 자부심이 낮은 이유는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경험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2) 김정일 위원장 지지도

<그림 7>은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평가하는 질문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지지도를 보여준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49.3%(2008년) → 54.3%(2009년) → 55.7%(2011년)로 상승세를 보여준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지도가 최근 4년간 증가한 이유는 건강이상에 따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동정심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2008년 8월 건강악화 이후 3개월 만에 여윈 모습으로 등장한 장면을 보면서 주민들의 동정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2010년 5월과 8월의 중국방문에 대한 심리적 선전효과도 상당히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7>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지지도(2008~2011)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하는 ‘지도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26%의 비중을 차지하여 과도한 군사비 지출(12~19%)이나 개혁개방 부재(12~19%) 등의 이유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도자의 정권유지 때문이라고 보는 주민이 적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식량난의 원인을 ‘지도자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시계열로 보면 26.1%(2008.7) → 28.1%(2009.7) → 25.9%(2011.6)로 최근 4년간 큰 변화 없이 26% 선을 유지하고 있다(<표 9>). 이는 1998년 12월 ‘좋은 벗들’의 조사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8.0%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식이 최근 10년간 18%가 상승한 것이다.³³⁾ 또한 10년 전과 비교할 때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의견이 크게 감소하고 지도자의 책임과 개혁·개방의 부재 때문이라는 의견이 늘어

33)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정토출판, 1999), 200쪽.

<표 9> 북한의 경제난 원인(1998, 2008~2011, 복수응답 허용)

단위: 명(%)

원인	1998*	2008	2009	2011
자연재해	805(38.6)	26(4.6)	24(3.9)	2(1.8)
과도한 군사비	153(7.3)	107(19.0)	112(18.3)	13(11.6)
잘못된 국가정책	190(9.1)	72(12.8)	79(12.9)	8(7.1)
관료주의 실정	181(8.7)	49(8.7)	63(10.3)	7(6.3)
지도자의 책임	168(8.0)	147(26.1)	172(28.1)	29(25.9)
개혁개방 부재	156(7.5)	102(18.1)	119(19.4)	14(12.5)
미국 경제제재	67(3.2)	22(3.9)	14(2.3)	4(3.6)
통일이 되지 않아서	43(2.1)	39(6.9)	24(3.9)	2(1.8)
결측	138(6.6)	-(28.9)	-(28.9)	33(29.5)
합계	2,088(100.0)	564(100.0)	612(100.0)	112(100.0)

* 1998년 자료는 강정구·법륜 엮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정토출판, 1999). 1998년 자료에서는 응답항목 중 ‘경제개발을 하지 않아서’ 83(4.0%), ‘비료·농약 부족’ 104(5.0%)을 포함하고 있으나, 위 표에 통합하기 어려워 열거하지 않았음.

난 것으로 보아 정치적 비판의식이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4년 동안의 변화는 미미하여 정치적 비판의식의 변화는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9>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미국의 경제제재와 봉쇄 때문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의식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으로 보는 사람은 3.9%(2008년), 2.3%(2009년), 3.6%(2011년)로 매우 낮으며 최근 4년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³⁴⁾ 10여 년 전인 1998년에도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의 경제제재로 돌리는 북한주민은 3.2%로 극히 작았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34)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를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비중이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이라는 정당화 논리가 실제 북한주민들의 의식형성에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관행적인 정치수사의 담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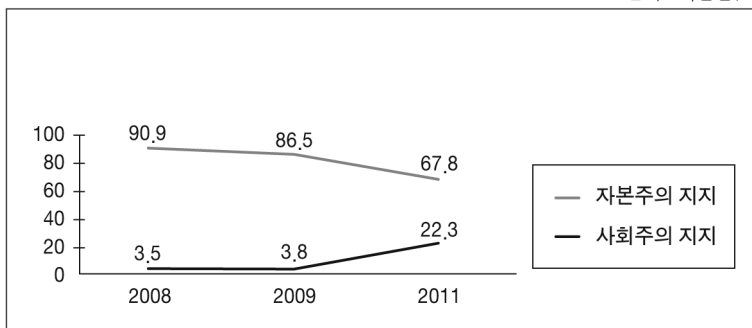
3) 사회주의 체제 선호 증가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변화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문항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주의 경제(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시장경제, 개인소유경제) 중 어느 것을 더 지지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 결과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했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4년의 변화를 추적해 보면 2010년 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아졌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최근 4년간 3.5%(2008년) → 3.8%(2009년) → 22.3%(2011년)로 2011년에 급상승한 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90.9%(2008년) → 86.5%(2009년) → 67.8%(2011년)로 크게 낮아졌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북한 경제가 국가적인 투자와 자원으로 일정부분 활성화 되어간다는 의미이고, 시장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계층이 사회주의 개혁경제에 의한 공급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보다 노동력을 대가로 생계를 보장받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선호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시장 환경이 악화된 반면 국가계획 경제는 호전되고 있다는 반증일 가능성도

<그림 8> 경제체제 선호도(2008~2011)

단위: 백분율(%)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체제비판의식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아직은 낮고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의 효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를 동정심을 얻는 계기로 이용하고,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 불꽃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조직적 결속력을 도모하며, 화폐교환 등의 조치로 빈민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선전선동이 체제비판의식을 억제하는 효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³⁵⁾ 2010년 9월 후계자의 공식등장 이후에는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상징조작의 효과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35) 2010년 8월에 탈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거주 김○○은 2009년 12월 화폐교환 이후, 국가에서 1인당 신화폐 500원을 지급했는데 4인 가족이기 때문에 2,000원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나중에 보니 시장의 물가가 폭등하여 생활이 더 어려웠으나 그 당시의 환경은 북한이 1946년 3월 5일에 실시했던 토지개혁을 연상시켰고 그만큼 감격했다고 하였다(2011년 6월 인터뷰).

7. 결론

지금까지 2008~2011년간 북한사회 변화 실태를 사적 경제활동과 주민생활, 정보유통과 문화적 변화, 사회통제, 정치의식화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주민들의 비공식 수입 비중은 최근 4년간 30%에서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응답자가 많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리였다. 장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약 70%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는 일부 집단과 계층에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병연³⁶⁾ 등의 기존 연구에서 북한주민의 사적 경제활동 비율이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번 조사는 북한주민의 사적 경제활동이 최근 4년 사이에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져주었다는 의미부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생활 변화의 또 다른 측면으로 빈곤층의 확대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입이 아예 없거나 최소 수입에 의존하는 빈민층이 늘어나는 반면, 10만 원 이상 혹은 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도 동시에 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하여 2000년 이후 생활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부류와 ‘더 나빠졌다’는 부류가 50.9%와 49.1%로 양극화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20~40대와 50~60대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대졸·전문대졸 출신자가 고졸출신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향이 강화되고

36)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있는 등 세대 간 계층 간 주민생활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보유통과 문화 영역에서는 주민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남한의 방송과 영화, 드라마 등 한류의 확산이 지난 4년간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류를 ‘자주 접해보았다’는 사람은 2009년과 2011년 사이에 23.3%에서 44.6%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약 70%의 응답자들이 탈북 후에도 북한소식을 접하고 있을 만큼 북한의 문화접촉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주의 가치는 26.7% → 20.4% → 17.8%로 약화된 반면, 개인주의 경향은 73.3% → 79.6% → 82.2%로 강화되고 있다. 정보와 문화접촉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의 한류 접촉 증대가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통제 영역에서는 빼라, 낙서 등 대정부 비판 행위가 60.2% → 58.6% → 69.7%로 증가하였으며 공안기관의 사회통제가 최근 4년간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규율은 3 대 7 정도로 변칙적 운용이 높은 가운데 지난 4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충화 등 조직생활은 2011년에 처음 추가한 문항으로 추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평균 70~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량난 때문에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의식화 영역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6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지지도가 건강악화 이후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도자에 대한 비판의식이 8% → 26%로 높아졌으나, 최근 4년간에는 26% 선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가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고 사회주

의 체제를 지지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시장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사적 경제활동의 공간이 확대되지 못하거나 위축되는 상황에 있으며 생활수준의 양극화 현상도 진행 중이다. 공안기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정보화와 문화유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정부비판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의식이 조금씩 와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정치의식의 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아직은 낮은 데다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의 효과가 작동하여 체제비판 의식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의 북한변화를 기초로 향후 5년을 전망해 보면, 소득의 양극화와 정보화의 진전, 정부비판 행위의 증대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와 사상을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주체사상이나 지도자에 대한 지지 등 정치적 비판의식은 급격히 형성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당국이 북한인의 의식구조를 파고드는 상징조작이나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북한식 정치의식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주민생활의 양극화가 엘리트와 인민대중 간의 불평등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경제 양극화가 파워엘리트 내부에 갈등과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강한 정치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 층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젊은 세대는 유동성이 비교적 높고 한류문화의 접촉 기회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집단보다 더 빨리 정치적 비판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어떤 논리로 선전선동과 주민설득 기제를 동원하며 정당화해 나가는가 하

는 부분도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접수: 2월 29일 / 수정: 3월 25일 / 채택: 3월 30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 인민보안성, 『법투쟁부분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평양: 인민보안성출판사, 2009).
- 장용순, “북한 노동당 부부장급 장용순의 강연록 녹취 자료,”(2007.7). [“북한 노동당 부부장급 장용순의 충격 강연록 전문,” 『월간중앙』, 33권 7호 통권 380호(2007년 7월)].

2. 국내자료

1) 단행본

- 강정구·법륜 위음, 『1999 민족의 희망찾기』(서울: 정토출판, 1999).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북한의 지역자립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 김병연·양문수, 『북한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탈북자 설문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평화학 연구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2010).
- 김성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명규 외,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 윤영관·양운철 위음,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9).
-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상호인식』(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2010).
- 이교덕·정교섭·이기동,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인식 실태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 변

- 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 임장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2) 논문

- 권영경. “북한경제, 2010년 마이너스 성장 양극화 심화,” 『통일한국』, 통권 제 336호(2011년 12월호).
- 박석삼, “북한의 사경제 부문 연구: 사경제 규모, 유통현금 및 민간보유 외화 규모 추정,” 『한은조사연구』(2002년 3월).
-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생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2권(2005).
-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2호(2011).

3) 기타 자료

-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0』(서울: 통계청, 2011).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각 년도).

3. 외국자료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BS: Pyongyang, 2009).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e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anuary 2011).

Kim, Byung-Yeon and Dongho Song,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Households in the Informal Economy: Size, Determinants, and Effect,"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1(2008).

平井久志, 『北朝鮮の指導体制と後継: 金正日から金正恩へ』(東京: 岩波書店, 2011年 4月).

福田恵介, 『新体制迎える北朝鮮経済開放の現実味』(東京: 週刊東洋経済, 2012年 1月).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2008~2011: Based on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Kim, Philo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2008 to 2011, based upon the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data conducted annually by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ocusing on the social aspect, this paper basically examines four areas; private economic activ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citizens, circulation of information and South Korean wave, social control, and political conscientization in North Korea.

For the last four years, the life of citizens in economic area has been highly dependant on markets, but the private economic activities could not be expanded or even shrunk down during the period, while polarization has been resulted in widening the gap between social classes and generations. Due to the weakening of the public security organs

in control, information flow and South Korean wave are spreading quickly, along with rising criticisms on the government and the diminishing sense of collective values little by little.

However, thes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changes have not been able to produce a serious effect on political conscientization among North Korean citizens. It is found that the Juche idea is maintained at a relatively high level of pride and support for Chairman Kim Jong Il, and higher affinity for the socialist system, including the continuing political consciousness level still works as well. Apparently, this is because of the difficulties evolving into political criticism among the people in North Korea, due to the low level of political consciousness and partly due to the effective working of propaganda.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social control, private economic activity, polarization, circulation of information, (South) Korean wave, juche idea, political conscientization.